전남도 연예인 F1팀 발족 전남도는 9일 오전 도청 대청마루에서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그랑프리 성공 개최 및 홍보를 위한 레이싱 연예인팀 발대식을 가졌다. 연예인 레이싱팀에는 탤런트 이세창, 개그맨 한민관·윤택·김형인, 가수 문희준, 신인그룹 뉴키스의 일라이, 레인보우의 오승아 등이 참여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조정안 처리 연기 왜?

배부른 민주당 '밥그릇 싸움'

서구갑·을 정수 다툼…17일 재논의키로
4인선거구 부활 뒷전…시민단체 등 반발

광주시의회가 9일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의원 정수 조례안 처리를 전격 연기했다. 강박원 시의회 의장은 이날 열린 제1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없는 가운데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수정 의결한 이 조례안을 오는 17~18일 열리는 제186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임시회에서도 시민단체와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4인 선거구제' 부활이 아닌 서구 갑과 을 기초의원 정수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효 논란 왜?**=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명자·손재홍·이정남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11시30분께 위원장이 없는 상태서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기초의원 정수 조례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4인 선거구제 분할은 일찌감치 의결됐지만, 기초의원 정수를 놓고 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자위 소속 의원 3명이 위원장 없이 의결하면서 '무효 처리' 논란이 불거졌다.

김성숙 행자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재선 의원이 물리력을 이용해 회의장 출입을 막는 등 방해를 했다"면서 "위원장이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당시 날치기 처리된 기초의원 정수 관련 조례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다"면서 재 논의 또는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거나, 위원장 사고 시에 한해 간사가 사회를 볼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행자위 간사인 이명자 의원은 "당시 조례안 처리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상임위 의원들이 다시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밥그릇 싸움 때문**=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배제한 채 이 조례안을 처리한 데는 일부 지역구 정수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 을이 지역구인 김 위원장은 5일 회의에 앞서 "서구 을(16만3천700여 명)이 서구 갑(13만6천200여 명) 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구 을 기초의원은 5명, 서구 갑은 6명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행자위 소속 다른 의원들이 난색을 표명, 회의가 진통을 겪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기초의원 선거구제 쪼개기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일부 지역구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과정에서 날치기 처리 논란이 불거졌다"며 "결국 시의원들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4인 선거구' 부활은 관심 밖**=이날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수 조례안이 무효 처리 논란을 빚자 광주시의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다음 회기에 행자위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4인 선거구제'는 '2인 선거구제'로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상임위 의원 간 '4인 선거구제 분할'에는 이견이 없었고 민주당 '당론'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서구 갑과 서구 을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문제이지 다른 정당의 진출을 보장하는 '4인 선거구제' 부활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 출신 MB맨들 고향 앞으로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 비서관
전남지사 후보 김대식씨 거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출신 MB맨(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광주시장, 전남지사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권 핵심부는 신선하고 검증된 인물을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후보로 내세워 지역 민심을 공략한다는 입장인 알려지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며 지역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던 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유력하다.

정 비서관은 9일 광주지역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2일 광주시장직에 도전하기 위해 비서관직을 사퇴할 예정"이며 "또한, 오는 26일과 다음달 2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출판 기념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광주에서부터 과거의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선거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변화를 주도하고 용기있는 광주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화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로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전남 영광출신의 김 처장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대외협력단장을 맡아 선거 조직을 이끌었던 MB 측근으로 꼽힌다. 김 처장은 "여권에서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지만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호남으로 내려가는 데는 이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호남은 철저히 인물 위주로 (공천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사람은 참 아까운데…'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시장 경선 배심원제 도입 시민 정치수준 무시하는 처사"

박주선 민주 최고위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당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도입을 검토 중인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컷오프 때 도입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최종심으로 이용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역량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8일 저녁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헌·당규에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에 국민경선이나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사용하도록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려면 원칙을 어겨야 할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지만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그러한 이유가 없다"며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정치 수준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해 광주를 실험장 내지 이벤트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배심원제는 오히려 수도권의 선거 연대를 위해, 또는 영남 등 민주당 세가 약한 지역에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시민배심원제에 대해 컷 오프 때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광주지역 의원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이라며 "조만간 광주지역 의원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경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포스코 제안 대구 돔구장 2만 5천석 규모

83만㎡ 부지 업무·주택·상업시설 조성

포스코건설이 대구에 제안한 돔구장은 83만㎡ 부지에 돔구장과 행정타운, 업무·주택·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광주시는 포스코의 제안서 포기로 일단 '광주 야구장 시민건립위원회'를 통해 야구장의 건설 방식 등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향후 돔구장건설이 재론의 가능성도 높아 제안서 내용과 대구시의 검토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대구에 계획한 돔구장은 부지 16만6천900여㎡에 연면적 10만9천여㎡, 지상 6층(최고 68m) 크기로, 좌석은 2만5천석이지만 최대 3만5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주변지역 32만600여㎡에는 공동주택 4천230가구를 짓고, 업무 및 상업시설(1만6천500여㎡), 학교나 공원 등 기반시설(23만8천여㎡)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포스코건설은 사업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공동주택 용적률을 160%에서 200%로 상향할 것과 돔구장 공사비 부족분은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감정가로 공급해 충당하고 임대주택사업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해줄 것을 지원사항으로 요구했다.

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어려울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돔구장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될 경우 돔구장은 대구시가 직접 운영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프로구단과 공동운영할 경우 개장연도에만 21억9천여만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포스코건설의 분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은 이미 1만6천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공급 과잉으로 주택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지 안으로의 위치 변경 문제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구 돔 야구장 조감도.